

일제히 후보 등록 ... 본격 선거전 돌입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이었던 24일 여야 각당의 광주시장·전남지사, 광주·전남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후보 등록을 마쳤다. 왼쪽부터 광주시선관위에 광주시장 후보 등록을 마친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전덕영 바른미래당, 나경재 정의당, 윤민호 민중당 후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6·13 지방선거·국회의원 재선거 광주·전남 선거열기 '후끈'

24일 6·13 지방선거에 나설 광주·전남 지역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들과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자, 광주시·전남도교육감 출마자들이 일제히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바른미래당 전덕영, 정의당 나경재, 민중당 윤민호 후보 등 4명이 등록을 마쳤다. 전남지사 선거에는 민주당 김영록, 바른미래당 박매호, 평화당 민영삼, 정의당 노형태, 민중당 이성수 후보 등 5명이 등록했다.

광주시장 선거에 나서는 이용섭 민주당 후보는 "시대정신에 맞는 '광주행복 1번가 플랫폼'과 '주요현안 집중점검 현장투

어'라는 새로운 투 트랙 선거운동을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아 역사에 남는 시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덕영 바른미래당 후보는 "광주와 호남이 수십 년 간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왔지만, 민주당 시정은 이권다툼과 부정부패로 인해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썩어버린 고인 물을 갈고 새로운 물로 바꾸기 위해 나섰다"고 강조했다.

나경재 정의당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광주의 미래를 밝히는 정책선거가 되어야 하고, 시민들이 후보의 정책에 대해 충분히 알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토론이 여러 차례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민호 민중당 후보는 "민주성지답게 자치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제대로 된 견

제세력, 진짜야당, 진짜진보세력 민중당이 시민들과 한판이 돼 광주정치를 이번만큼은 확 바꾸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최근 야당이 잇따라 후보를 내면서 다자 구도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전남지사 예비후보들도 이날 모두 후보 등록을 마무리했다.

김영록 민주당 후보는 "보다 더 겸손한 자세로 전남의 새로운 천년, 내 삶이 바뀌는 전남 번영시대를 도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후보등록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는 등록을 마치고 곧바로 나주에 있는 광주 전남연구원에서 열린 '전남농공단지협의회 포럼'에 참석했다.

박매호 바른미래당 후보는 등록 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고 선거캠프 전열 정비에 들어갔다. 박 후보는 "새롭게 펼쳐지는 전남 새 천년의 당당한 첫걸음을 박매호가 함께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영삼 평화당 후보도 후보 등록과 함께 "우리 전남도 보다 젊고 역동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전남발전을 위한 역동적인 변화를 이끄는 주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노형태 정의당 후보는 후보등록 후 곧바로

로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살맛나는 농민, 살아나는 농업을 이끄는 전남농민이 되겠다"며 농민부지사 신철, 도지사 직속 농정위원회 설치 등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5명의 후보 중 가장 먼저 후보등록을 한 이성수 민주당 후보는 "진짜야당 민중당, 진보정치 이성수를 키워 달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 후보는 무안전통시장·강진시장 방문에 이어 완도군의회에 출마한 김영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광주시·전남도 교육감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자들도 이날 후보 등록을 마쳤다.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장휘국·이정선·최영태 후보와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인 고석규·오인성·장석용 등 6명의 후보자는 이날 모두 후보 등록을 마쳤다.

광주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현 장휘국 교육감의 3선 도전에 맞서 이정선 후보가 최영태 후보에게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제안했다. 최 후보는 이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장 교육감의 3선 저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단일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대통령 개헌안 무산

'투표 불성립' ... 靑 "헌법의무 저버린 野에 매우 유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하 정부개헌안 혼용)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선언됐다.

〈관련기사 4면〉

헌법은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헌안을 다시 투표에 부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되지 않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의결정족수(192명) 부족을 이유로 정부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1987년 개헌 이후 30년 7개월여 만에 진행된 개헌안 투표에는 재직 288명 중 114명만 참여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헌법 130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오는 본회의를 열어 의결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참여의원 숫자가 의결정족수인 재직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표결은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총 118명 중 112명 참여)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본회의 불참을 예고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개헌안이 야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선언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 의원들은 위헌 상대인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았다"며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5년간 1629억 투입 12개 공원 매입

도시공원 보상 계획 확정

광주시가 2020년 하반기 일몰제에 대비해 향후 5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상 계획을 확정했다. 1629억원을 3단계로 나눠 12개 공원 66만6000㎡를 매입하기로 했다. 나머지 공원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 매입하거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매입 및 일부 조성비를 충당할 방침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25곳(면적 11.01㎢)을 매입하는데 1조7708억원,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1조1011억원 등 모두 2조87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5곳 가운데 재정을 직접 투입해 매입하는 공원 12곳, 타 사업 연계 3곳,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10곳 등으로 각각 분류했다.

보상 대상 12개 공원 가운데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월산, 발산, 우산, 신촌, 학동 등 5개 공원을 1단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방림, 봉주, 양산, 황룡강대상, 본촌, 신용 등 6개 공원을 2단계로 해 각각 491억원과 257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 대상은 영산강대상공원 1곳으로 모두 881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9개 공원 370필지를 171억원에 매입하기 위해 보상 협의에 나서는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지 소유주의 반발로 인해 협의에 실패한 경우 오는 2020년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1단계 마곡·수광·송암·봉산공원 등 4곳, 2단계 중앙·중외·일곡·송정·운암산·신용(운암) 등 6곳을 추진한다. 다만 2단계의 경우 개발면적을 10% 미만으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초고층화를 억제했으나, 1단계는 기존 국토교통부 지침을 그대로 반영해 개발면적 30% 미만을 적용하고, 35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우려가 높다. 또 일각에서는 1단계 사업 제안서가 공원 조성비를 지나치게 부풀려 고층·고밀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들의 제안서를 공개해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일보
6·13 지방선거 표발 현장-여수 ▶5면
신팔도유람-경기 DMZ·민통선 ▶18면

깨끗한 내 한 표

살맛 나는 우리 동네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6월 8일 ~ 9일에는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만 19세 이상(1999.6.14. 이전 출생)의 주민등록자(재외국민의 경우 2018.2.23. 이전 주민등록을 한 사람)
외국인의 경우 2015.5.21. 까지 영주의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5월27일(일) ~ 5월29일(화), 선거권을 확인하세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구·시·군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8일(금) ~ 6월9일(토),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자 누구나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분은 5월22일(화) ~ 5월26일(토)에 거소투표신고하고,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영내·원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경찰, 병행·요양소에 머무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거소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시·도청 및 구·시·군청 민원실,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발연과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불법선거는 국민없이 1390(선관위), 112(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